

<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>

아리셀 참사 2주기, "산업재해 넘어 복합정책 실패로 재조명해야"

- 민주연구원은 아리셀 참사 2주기를 맞아 「'복합정책' 실패로서의 참사 재조명 - '위험의 이주화'가 드러낸 구조적 정책 공백」 정책브리핑을 발표했다.
- 이번 브리핑은 지난 2년간의 담론 지형이 사후 처벌과 책임 규명에 편중되어 구조적 원인이 충분히 의제화되지 못했다는 점을 짚고 아리셀 참사를 개별 기업의 일탈이 아닌 노동·이주·안전·젠더 정책 전반의 복합적 실패로 재정의하고자 작성되었다.
- 브리핑을 작성한 류이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"희생자 23명 중 이주노동자는 18명(78%), 여성노동자는 17명(74%)에 달했지만, 이주노동자 희생자 중 고용허가제(E-9) 비자를 통한 노동자는 한 명도 없었다"며 "오히려 '상대적으로 안정적'이라 평가되는 F계열 비자 소지자가 불법파견의 표적이 되는 구조적 원인이 그동안 간과돼 왔다"고 밝혔다.
- 브리핑은 지난 2년간 보도된 관련 기사 2,970건을 분석한 결과, '안전공업', '중처벌', '노동부', '불법파견' 등 사후 책임 규명 키워드에 집중된 반면 '이주노동자' 관련 키워드는 주변화되어 있었다고 분석했다.
- 이를 토대로 브리핑은 ▲위험의 이주화 ▲동포노동자의 이중 배제 ▲위험의 젠더

화 ▲재난안전 정보·언어 접근성 실패 ▲정부 책임의 형식화 ▲애도의 차등성 등 6대 구조적 실패를 제시하고, ①비자-노동 현장 괴리 해소 ②중대재해처벌법 내 이주노동자 취약성 반영 ③고용허가제 개혁 ④재난안전 정보의 다국어화 ⑤포노동자 정책 범주 개선 ⑥이주여성 노동권 가시화 ⑦국가 책임 실질화 ⑧지자체 사회통합 강화 등 10가지 정책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.

- 최근 아리셀 경영책임자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되고, 법적 책임을 회피·지연시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상황은,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처벌 강화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. 그러나 동시에, 어느 한 분야의 법 제도 강화만으로는 이런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도 드러낸다. 이번 브리핑이 처벌과 책임 규명을 넘어 비자 제도, 고용허가제, 재난안전 정보 접근성 등 정책 전반의 구조적 공백을 짚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.